

현금성 복지지출 많으면 '페널티'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올해 예산 4.3조 가량 줄어들어 예산 과다 이월·불용 페널티 대상 페널티 비율 높은 8곳 10억씩 삭감

앞으로 현금성 복지지출이 많은 시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받을 때 페널티가 부여된다. 올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교부금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든 학생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국세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제도다. 올해 예산 기준 68조9000억원 규모가 편성됐지만, 정부는 최근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에 따라 4조3000억원가량 줄어든 64조6000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교육재정의 지출 효율화를 위해 현금성 복지지출을 축소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한다. 또한,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페널티 항목을 신설한다. 비율이 높은 8곳을 골라 10억원씩 삭감할 예정이다.

편성한 예산을 다 쓰지 않고 남기거나 남기는 이월·불용액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 가능한 여력을 고려해 보통교부금을 배분한다. 과다 이월액이나 불용액도 페널티 대상이다.

이처럼 효율적으로 관리해 모은 예산은 신규 정책분야에 투자를 유도한다. 심화하는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늘봄학교'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재정 지원항목을 개편해 늘봄학교 운영비 및 시설비 등 공통·일반경비에 대한 재정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학생 개개인의 학습속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 및 기반 시설(인프라) 등 구축을 위한 재정을 지원한다.

기초학력 진단부터 보장까지 전 과정을 교부금 지원 대상에 신규로 포함해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보장하고, 평

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인건비·운영비 지원을 신설한다.

내년에는 교육부 차관 산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배분 등 제도 운영 전반에 전문가 및 현장(시도교육청)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산하에는 '보통교부금 분과위원회' 및 '특별교부금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2인을 포함해 심의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인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과 함께 하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되며, 개정된 사항은 2025년 보통교부금 배분 시부터 적용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부금 배분·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용도 건축물 보정공사비 8% 상승률 반영

서울시,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개정

서울시는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도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시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 적정한 예산 관리와 건축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련 지침을 만들어왔다.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 공공건축물 공사 예산을 책정할 때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시는 늘어난 공사비 현실을 반영해 지난 2022년 새롭게 바꾼 가이드라인을 손질했다.

우선 시는 지난 2022년도 책정했던 공사비 가이드라인(평균 386만3000원)과 올해 조사한 서울시내 33개 용도 건축물 보정 공사비(평균 417만5000원)를 비교해 평균 8.06% 상승률을 반



서울시청. / 손진영 기자

영기로 했다.

공사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 지수와 서울시·25개 자치구가 추진한 공공건축사업 3년 치 공사비 등을 검토해 산출했다.

시 관계자는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법규를 조사해 현재 기준과 맞지 않는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고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건축시공 분야)의 자문을 받아 공사비 단가 적정성 등을 살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경기도,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투명성 기여

국토부와 검증 시범연구사업 협약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산정·검증하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과정에 의견 제시, 이의 신청 1차 검토 등으로 참여해 공시가격의 투명성·정확성 향상에 기여한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이런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연구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9월까지 표준부동산 선정 및 특성조사 검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시, 이의신청에 대한 1차 검토 등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

특히 3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일원과 2024년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았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검증센터를 설치



경기도청 전경.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서울시에 이어 올해 경기도와 충청남도까지 공시가격 검증 과정에 참여시켰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산정·검증 과정에 광역지자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사(토지), 한국부동산원(주택)을 통해 조사·평가해 결정·공시하고 있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고교 무상교육 경비부담 특례 연장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교육청, 증액교부금 세입반영 못해 교육재정 상황 반영 대책 강구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이란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9년 고3부터 시작해 2022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은 1인당 연평균 160만원, 3년간 480만원을 지원받는다.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는 지난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다.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 지방교육 재정의 충격 완화를 위해 2020~2024년까지 5년간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교육청, 일반지자체가 각각 47.5%, 47.5%, 5%를 부담하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는 올해 12월 말 일몰된다. 일몰시 지자체 부담분 역시 사라지고, 내년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은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정근수 교육감은 “올해 중앙 정부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교육청으로 증액 교부 하는 예산은 전국 1조원, 서울 1761억원이었다"라며 "하지만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 법안의 일몰을 전제로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편성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도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세입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미반영, 2024년도 세수 결손 등의 영향으로 202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10조8102억원)와 비교해 3500억원 가량 축소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2년 이후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해 왔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2022년 7조5896억원이었던 교부금은 2025년 6조1231억원으로 2022년 대비 1조4665억원(19.3%)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세입 축소 영향으로 예산의 지속적 감액 편성이 불가피했다. 예산 기준 2023년 12조8915억원, 2024년 11조1605억원(1조7310억원 감액)에 이어, 2025년에는 10조8102억원(3503억원 감액)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은 지난해와 올해 연속 세수 결손, 고교 무상교육 일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논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등으로 세입 감소 요인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반면, 세출은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유보 통합, 기초학력 획기적 신장 등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청의 세출 구조는 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70%를 상회한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고려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10월 30일(수) 음력 : 9월 28일

수도권 날씨 11~21°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55 | 해질 / 17:36

백령도 14/18, 파주 8/20, 서울 11/21, 양평 11/20, 용인 12/20, 수원 12/20, 인천 12/19, 평택 10/20

연천 9/19, 동두천 9/20, 가평 9/2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사전투표 마친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당선될 것” /사진 뉴스1
▲머스크, ‘해리스’ 폼하 발언…“암약 세력 ‘꼭두각시’…암살해도 무의미”

▲“中·인도, 국경 분쟁지역 주둔 병력 80~90% 철수”
▲러시아군, 이달 우크라 영토 기록적 진군…2년 7개월만 최대



▲총선서 與과반수 실패에 궁지몰린 디이시바…“野에 부분 연합 타진 방침”
▲‘최고령’ 프랑스 총리, 목 주위 수술 마치고 업무 복귀 /사진 뉴스1